

강제몰수에 따른 국방비 삭감이 미 군사력에, 아시아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

2012년 10월

피터 W. 싱어
이근수 옮김

주(註): 이 글은 원래 “타임”(Time.com)에 5부작으로 발표된 것이며, 원문 (“Sequestration and What it Might Mean for American Military Power, Asia, and the Flashpoint of Korea”)은 [브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저자와 “타임”의 허락을 받아 국내 독자들을 위해 번역본을 발행함을 밝힙니다.

제1부 국방비 강제몰수 상황

최근 몇 개월 동안, 워싱턴에서는 강제몰수 sequestration 에 따른 국방비의 삭감과 그것이 미국의 군사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존 매케인 John McCain 상원의원은 국방비 삭감이 “미국의 군사력을 붕괴시킬 것”이며, “국가를 수호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 미 육군 참모총장 레이먼드 오디어노 Raymond Odierno 장군은 “이 같은 대규모 삭감은 미국의 군사력에 재앙을 불러 올 것”이라고 의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워싱턴 타임즈> Washington Times 에서도 “순수한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군비삭감으로 그 동안 다른 국가들보다 우위에 있던 미국의 군사적 위상이 상실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2] 또한 레온 파네타 Leon Panetta 국방장관은 예산삭감으로 초래될 미국의 군사적 무능력을 “종이 호랑이” paper tiger 에 비유하면서 “유사시 적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오히려 “적의 침공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3]

군사비의 강제몰수는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실수이다. 만약 의회가 미국의 채무 딜레마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약 5,000억 달러의 국방예산이 내년 1월을 시작 (첫 해에 대략 550억 달러 규모의 삭감)으로 향후 10년 동안 강제적으로 삭감될 것이다. 마치 푸줏간에서 고기를 자르듯,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비율로 잘라내는 일반화된 방식의 국방예산 삭감은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도리어 미국의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 국방비 삭감에 반대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지금은 미국 내 국민들을 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전세계로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말은 중요하다. 특히 자유세계의 중심 수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자신의 능력에 대해 말할 때는 더욱 그렇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한마디 한마디를 항상 예의주시한다. 예를 들어, 2012년 8월에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국방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DA 의 주최로 마련된 한국의 고위급 국방 지도층 및 전문가들과의 회의에서, 한국의 한 고위

인사는 “미국의 이러한 입장이 앞으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지도자들이 비관적이고 암울한 미래 전망을 내놓을 때, 이를 북한과 같은 적성국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만일 “적의 침공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보다 합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나약하고 “이빨 빠진” 존재가 될 것이라고 전세계가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떠들어 대는 것은 결코 최선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중대한 이해관계와 히스테리적 흥분상태, 그리고 정책적 문제에 골몰한 사람들이나 고민해볼 만한 복잡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사실, “강제몰수” *sequestration* 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 (‘강제몰수’라는 용어는 채권자나 국가에 진 빚을 갚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의미의 고대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 글은 강제몰수에 관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 보면서 강제몰수에 따른 예산삭감이 미국의 군비와 군사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대체로 일자리와 선거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워싱턴 정가의 전형적인 논의에서 탈피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국방비 강제몰수의 문제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어떻게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배경 및 다가오는 예산삭감의 실질적인 원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한 상황적 맥락을 살펴보고, 전세계 군비지출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강제몰수가 미국의 국방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자 미국의 군사적 “핵심” *pivot* 지역인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면서 미국의 국방비 강제몰수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에 어떤 잠재적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간의 대치가 언제 다시 전쟁으로 확대될 지 모르는 한반도 지역에 대해 군사비 삭감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점검할 것이다. 사실상 한반도야말로 강제몰수에 따른 국방비 삭감의 영향력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이다.

“세계 최강” *Segye Choigang* 이라는 말은 한국인들이 미국 군사력을 설명할 때 흔히 사용하는 단어이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second to none* 혹은 “세계 최고” *the best in the world* 라는 의미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나라의 독자들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실제로 강제몰수가 이루어졌을 때에도 미국이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라는 것이다.

1조 달러: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예산 상의 의미는 무엇일까?

강제몰수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그에 앞서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언급부터 해야 할 것이다. 합참의장에서 국무장관에 이르는 지도층들은 경제안보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국가 안보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16조 달러를 넘어 증가일로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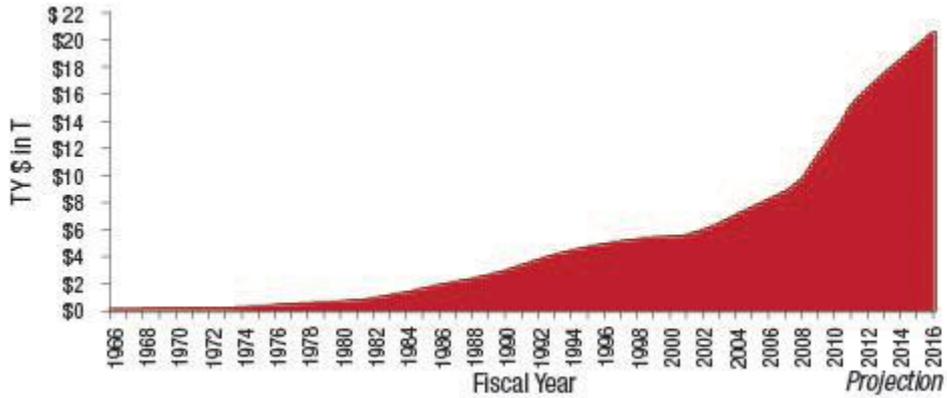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양 정당 모두 그 동안 부채 감축에 별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이 예산 흑자를 달성한 것은 겨우 5년에 불과하다.

이 같은 수치가 좀 더 걱정스러운 이유는 국가 부채가 이제는 미국의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ion: GDP* 을 넘어 섰기 때문이다. 의회 예산 사무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는 만일 국가 부채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2050년에는 미국의 총 부채가 GDP의 세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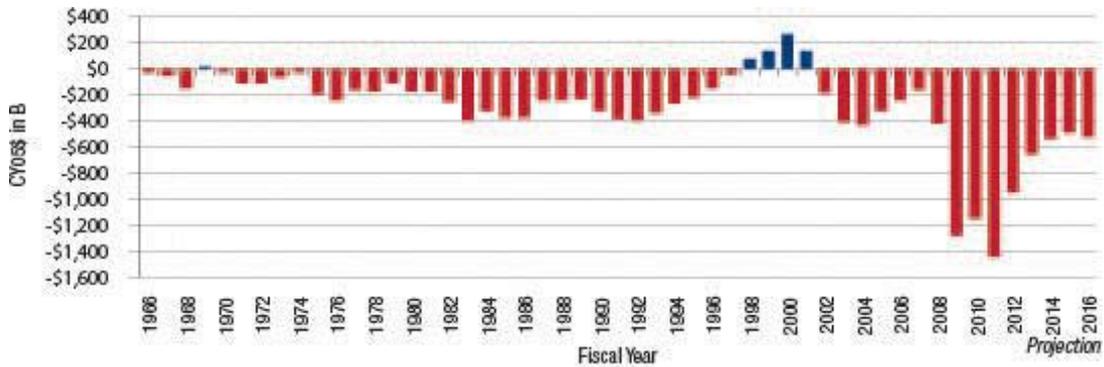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재정상황은 미국을 초강대국이라기보다는 그리스와 같은 나라로 보이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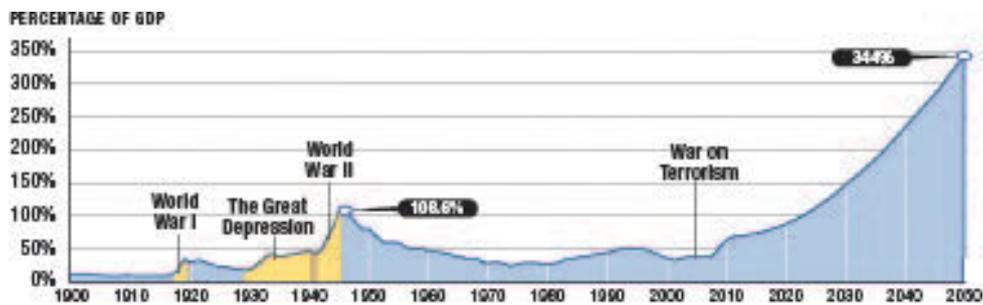
연방정부 부채 규모^[4]



연방정부 재정수지 (적자/흑자)^[5]



GDP 대비 부채 규모^[6]



16조 달러. 16,000,000,000,000. 무려 14자리 숫자이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예산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최소 향후 10년간 논의를 지배할만한 거대한 수치이다. 사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는 어느 정도 크기인지도 알 수가 없다. 아마도 트릴리언 trillion 이라는 수는 가가질리언 gagazillion 이라든지 보돈카질리언 bodonkajillion 이라고 불러도 별 상관없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오늘 16조 달러짜리 수표를 우편으로 받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상상을 해보는 것이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현재 미국이 지고 있는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에는 대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국의 부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들:

- 16개의 마샬플랜
- 32개의 뉴딜정책
- 16년간 나토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군 예산
- 모든 미국 세입자의 48년간 임대료
- 모든 미국 주택보유자의 18년간 용자금
- 모든 미국 노동자의 176주간 휴가

국가부채와 강제삭감에 관한 최근 정치적 위기 이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이 마침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 미국의 부채 문제에 대해 그 동안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단지 장기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 즉 지금 우리는 해결하지 않아도 될 문제로 치부해 놓았던 것이다. 앞 세대에게는 손자 세대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자녀 세대의 문제로 떠넘기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물려받은 16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는, 더 이상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부채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보다는 부채 삭감에만 치중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먼저, 2011년 가을 채무한도 연장이 의회에서 지연되면서 미국은 신용등급 하락을 자초하게 되었다. 가까스로 의회에서 채무한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막판에 조건이 붙었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의 강제몰수라는 곤경을 만들어 낸 2011년도 예산통제법 Budget Control Act 이다. 이 법은 일차적으로 미국 국방비에서 400억 달러 이상을 삭감하고 부채 증가를 반전시킬 일련의 개혁방안을 찾기 위해 양당의 대표를 포함하는 “상하원 합동위원회” Super Committee 의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2013년부터 강제몰수에 따른 의무적 예산삭감이 바로 적용된다. 이 경우 1조 2천억 달러의 가지치기 식 삭감이 이루어져 국가 안보와 국내 프로그램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의무적 삭감이라는 위협을 통해 차년도에는 양당이 타협안을 찾도록 하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대다수의 미국 국민이 지지하는 재정지원 혜택과 세계개혁을 모두 담은 정책 패키지를 만들도록 하자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합동위원회에서는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 이제 강제몰수에 의한 예산 난도질이 발생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는 의회가 합동위원회 대표들이 결여하고 있었던 성숙함과 타협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극단적인 당파주의적 풍토 Hyper-partisan climate 와 함께 지역구에 대한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상황,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라는 조건들은 의회 내부의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의회가 예산을 깨고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들은 가을 선거 이후 ‘레임덕’ 기간에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중요한 결정을 막판까지 지연시키고 있다가 불확실한 선거 결과에 따라 협력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그래서 강제몰수에 의한 국방예산 삭감이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그러한 잠정적 위기 상황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면밀한 평가를 해 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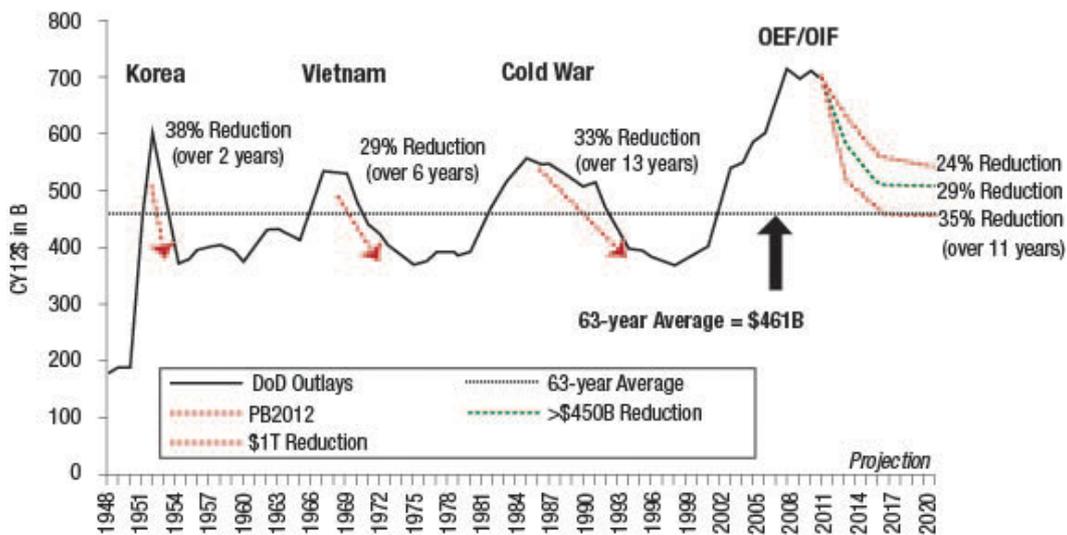
그러나 많은 논평가들은 강제몰수나 추가삭감 없는 시나리오만 생각하고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사실 바람직한 합의에 도달하여 강제몰수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추가적인 대규모 국방비 삭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상하합동위원회에서 논의는 되었지만 이행되지 못했던 타협안이 아마도 ‘레이덕’이 시작되면서 논의될 것이며, 거기에는 200~30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 국방비 삭감이 포함될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미국의 국방예산이 향후 대폭 삭

감이라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단지 강제몰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 예산상의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다 (사실 부채감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몰수를 단행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이 강제몰수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이유이다. 그리고 강제몰수는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계속해서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것이다). 또한 이것은 지난 60년 동안의 미국 국방예산의 역사적 패턴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1948~201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 변화^[7]

(2012년 기준,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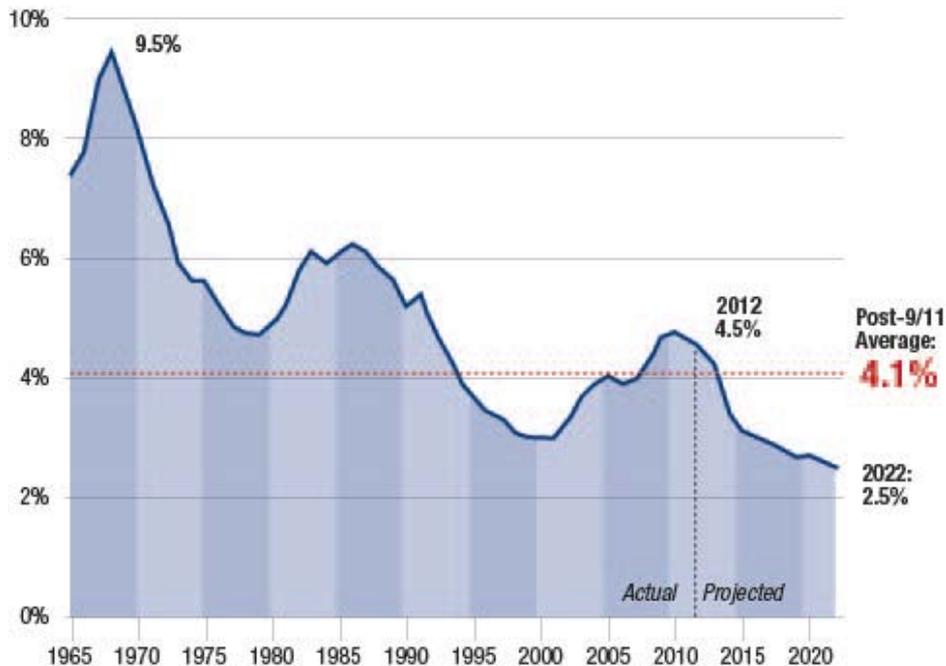


국방예산의 역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 10년 간의 성장만을 목격해 온 현 세대에게 앞으로의 국방비 삭감은 매우 중대하면서도 생소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패턴을 통해 과거 탈냉전 시기의 감축과 대비해 보면 향후 국방예산의 감축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범위를 짐작해볼 수도 있다. 예컨대, 최악의 강제몰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감축이 이루어지더라도 미국의 방위비는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이 아닌 대략 평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광범위해진 미국 경제를 기준으로 보면, 그 감축의 규모는 훨씬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보다 작았던 미국의 경제 규모와 냉전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과거의 국방비 지출은 지금보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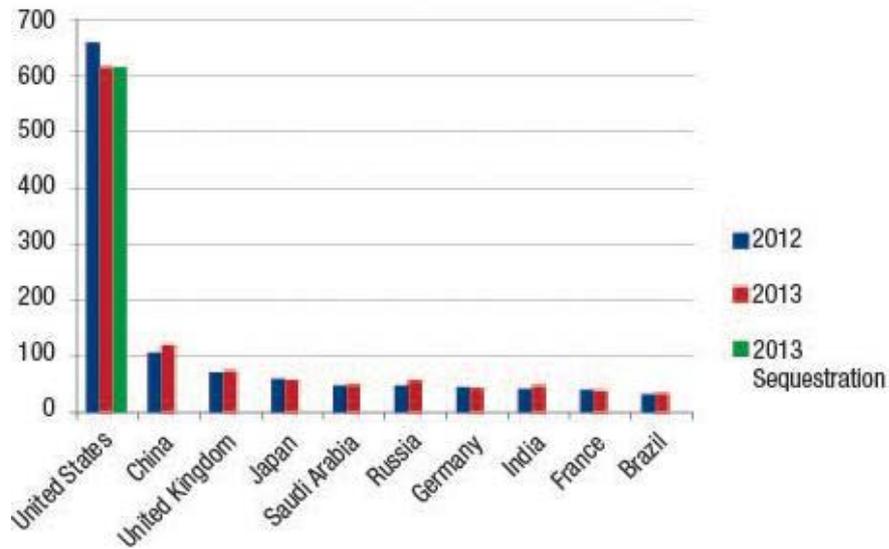
GDP 대비 미 국방비 비중의 변화⁸⁾

제2부 상황이 중요하다: 강제몰수와 전 세계 대비 미국의 군비 지출

지금까지 증가일로에 있는 막대한 부채로 인하여 (형편없는 정치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강제몰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경로를 살펴보았으며, 꼭 그러한 경로를 따르지는 않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국방비 삭감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가 “미국의 군사력을 파괴할 것”이라든지, 미국이 더 이상 “잠재적인 적성국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든지 등의 예측을 포함하여, 국방비 삭감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각국과 비교하여 미국의 국방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그 어떤 국가도 왜소해 보이도록 하는 능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세계의 어느 국가도 필적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의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예산 규모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비단 다른 국가들과의 상대적 차이에만 있지 않다. 국방비 지출 주요국들과 미국 간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그 중에는 영국이나 일본처럼 가까운 동맹국도 있고, 인도나 브라질처럼 적성국이 될 가능성이 낮은 국가들도 있다. 상위 10개국 중에서는 오로지 중국과 러시아 2개 국만 잠재적 적성국의 범주에 들어 갈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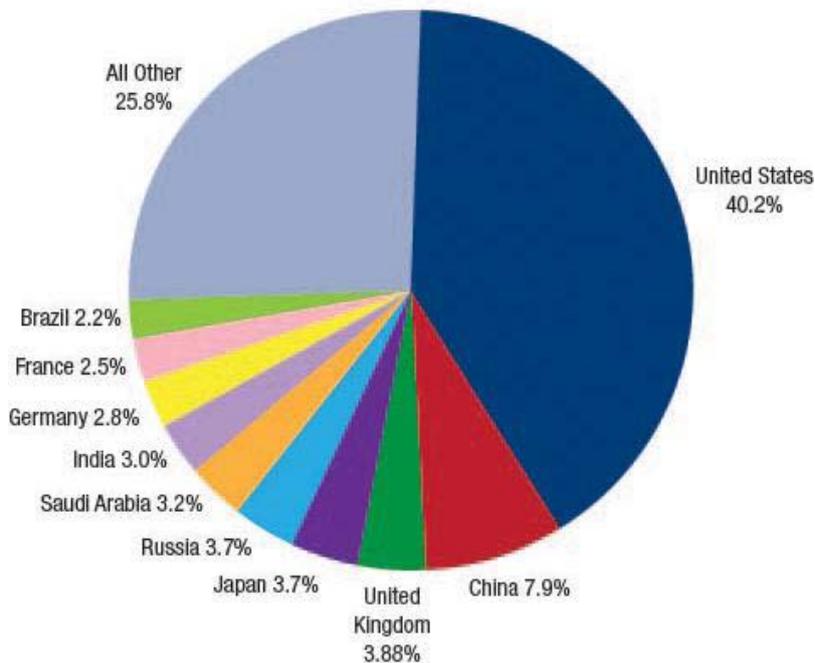
세계 상위 10개국의 공식적 국방예산 규모 및 예측^[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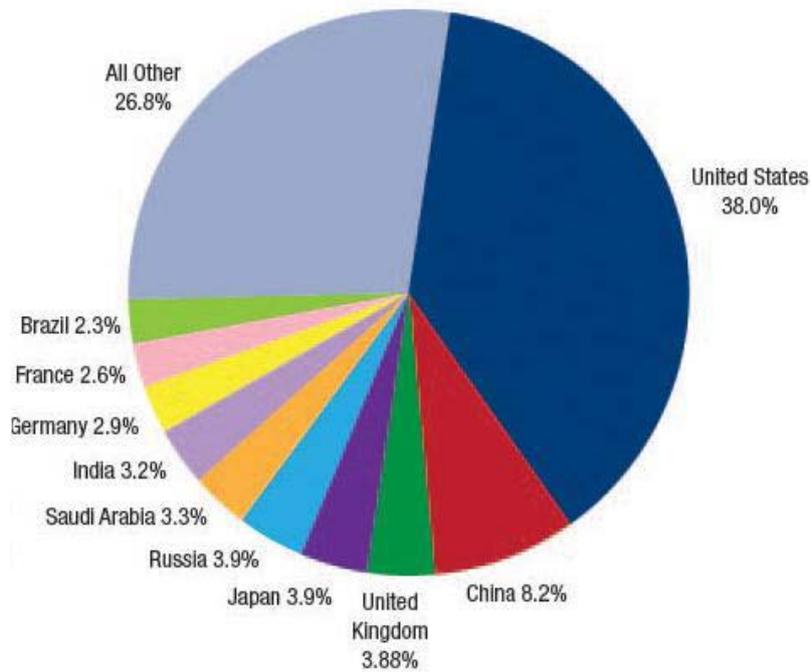
미국의 군사력 변화를 보다 명료하게 살펴 볼 수 있는 방법은 전세계의 군사비 지출을 모두 합쳐보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전세계 지출의 절반을 넘었지만, 지금은 전세계 군사비의 40%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강제몰수는 이 수치를 대략 2% 정도 감소시키겠지만, 이는 어떤 우발적 상황이나 전쟁에 의한 지출을 배제할 경우 전세계 군사비의 약 3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전세계 군사비 지출 대비 상위 10개국의 2013년 국방예산 추정^[10]
(강제몰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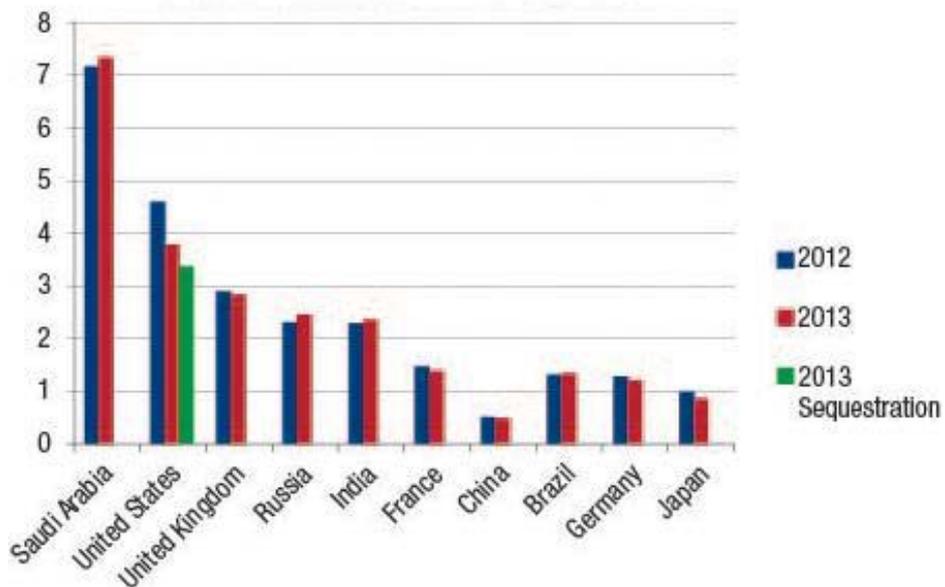
전세계 군사비 지출 대비 상위 10개국의 2013년 국방예산 추정^[11]
(강제몰수가 시행될 경우)



사실,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볼 때
만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2위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강제몰수가 전체 순위에 변화
를 가져오지 않는다 점은 마찬가지이다.

군사비 지출 상위 10개국의 GDP대비 국방비^[12]



덧붙이면, 오늘날 미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실제 데이터와 국방비에 대한 대중의 인식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 고리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정치에서 진실이 통하지 않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단절 현상을 성급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단지 유권자의 58%만이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전세계 어떤 나라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겨우 33%만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전세계의 모든 나라를 합친 것만큼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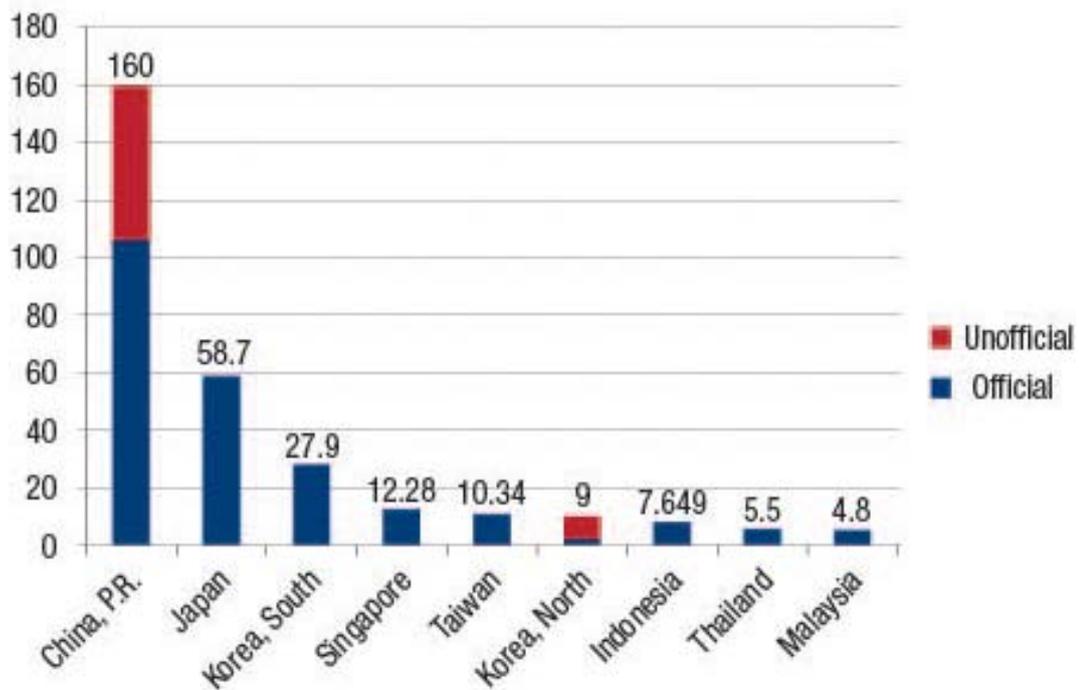
제3부 동아시아의 강제몰수 상황

미국이 글로벌 파워와 책임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난 전략적 변화를 무시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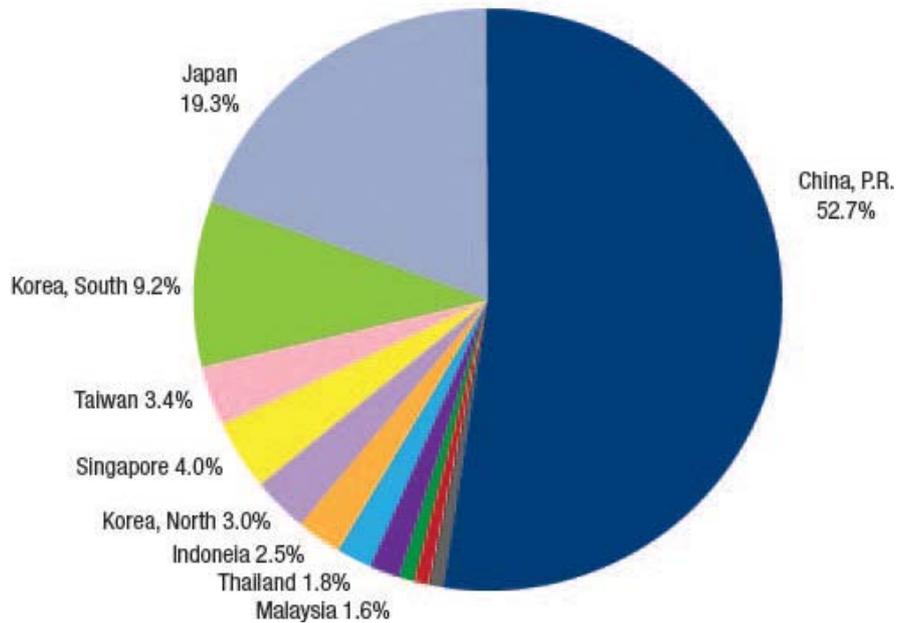
수는 없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전략적 관심의 초점이 다시금 아시아 지역에 맞추어졌으며, 대전략 Grand Strategy 에서도 “중추” 혹은 “재균형” rebalance 에 집중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에서 강제몰수의 원인을 살펴보고 미국의 국방예산을 전세계의 국방비 지출과 비교해 보았지만,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빠뜨린 셈이다. 미국의 국방비를 전세계적 상황에서 검토해야 할뿐만 아니라 지역적 국방비 지출과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은 공식적인 예산과 실질적인 전체 비공식 예산 양자 모두를 고려할 때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제4부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북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10억 달러라는 공식적인 국방예산과 90억 달러의 좀더 현실적인 추정액 사이에 간극을 보이는 나라이다.^[14]

2012년 동아시아지역의 국방비 추정액 (미화 10억 달러)^[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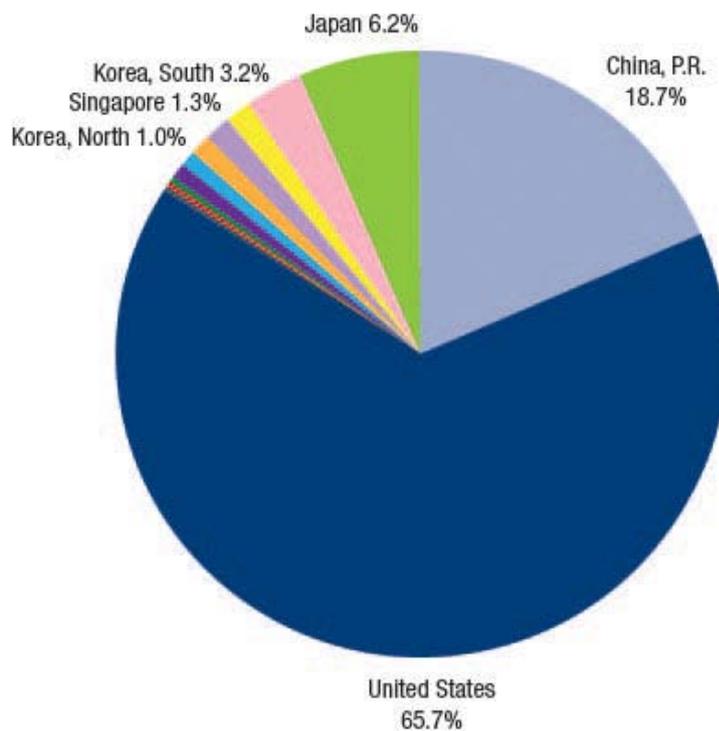


2012년 동아시아지역 12대 강국의 국방비 (미화 10억 달러)^[16]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말하지만, 이 수치도 진 전히 다르게 해석된다.
 정한 아시아의 초강대국인 미국을 포함시키면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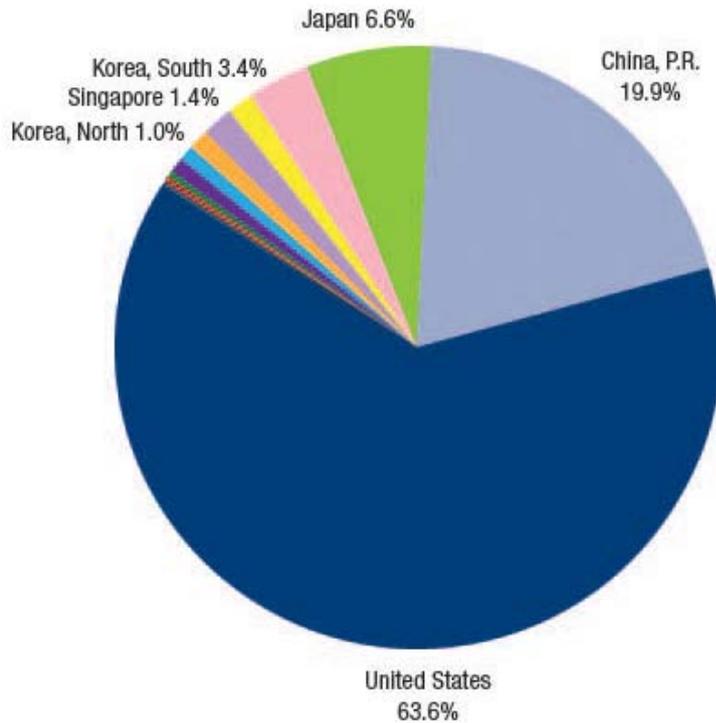
2013년 미국과 동아시아지역의 국방비^[17]



만일 국방비 강제몰수 이루어질 경우 미국의 상대적 비중은 작아지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압도적

인 우위를 점하게 된다. 만약 미국의 동맹국까지 포함시키면 훨씬 더 압도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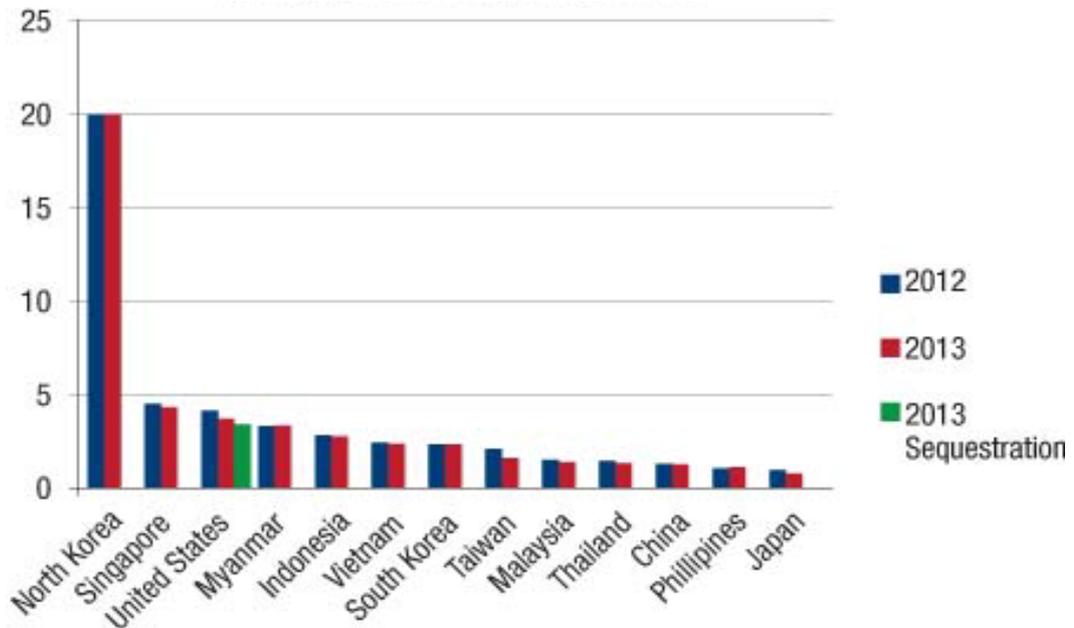
2013년 미국과 동아시아지역 국방비^[18] (강제몰수가 시행될 경우)



물론 미국이 글로벌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수치를 거론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칠 수는 없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 해군 대(對) 영국 해군의 상황과 유사하게, 중국처럼 떠오르는 지역 강대국은 직접 비교한 상대적 수치 이상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 당시 영국이나 오늘날 미국과 같은 세계적 강대국은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포진함에 따라 세력의 범위는 넓지만 밀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당시 영국은 그 다음 순위 2개 강대국을 합한 것보다 큰 함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군의 규모에 대한 지침으로 “2국 표준” two power standard 을 사용했다). 하지만 지역 강대국은 자신의 자원을 한곳에 집중시킬 수 있다. 물론, 세계적 강대국은 상황이 중차대해지면 전략적 시나리

오에 따라 다른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지역 강대국의 성장에 위협을 느끼는 해당 지역 내 다른 동맹국을 활용하여 지역 강대국을 견제함으로써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도 있다.

GDP 대비 군비 또한 비슷한 중요성을 보여준다. 말라 죽은 경제와 요새국가 a garrison state 의 암울한 조합에 빠져 있는 북한은 차치하고서라도, 미국의 GDP비율은 군비감축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여전히 높은 순위를 가진다. 최악의 강제몰수 시나리오 하에서도 미국의 군비는 GDP의 3.45%가 되는데, 이는 작지만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경제를 가진 중국의 2.36%보다 1퍼센트 이상이나 높은 수치이다.

미국과 동아시아지역의 GDP 대비 군사비^[19]

제4부 강제몰수와 한반도

미국의 지도자들이 강제몰수가 미국 군사력에 “재앙을 불러 올 것”이며 그로 인해 “미국과 경쟁국 간 군사력의 격차”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한다면, 한국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심각한 우려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과거 미국의 영향력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했으며, 여전히 미국과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1950년 당시 한반도에서 미국의 세력 약화와 동맹 이완을 틈타 북한이 한국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어떻게 계산을 해봐도 국방예산 감축이 미국을 북한 같은 적성국에 맞설 힘조차 없는 “중이호랑이”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강제몰수가 시행 되더라도 미국의 국방예산은 북한보다 60% 정도가 아니라 무려 60배나 더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예산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분명 오류가 있다. 왜냐하면 국방예산만이 군사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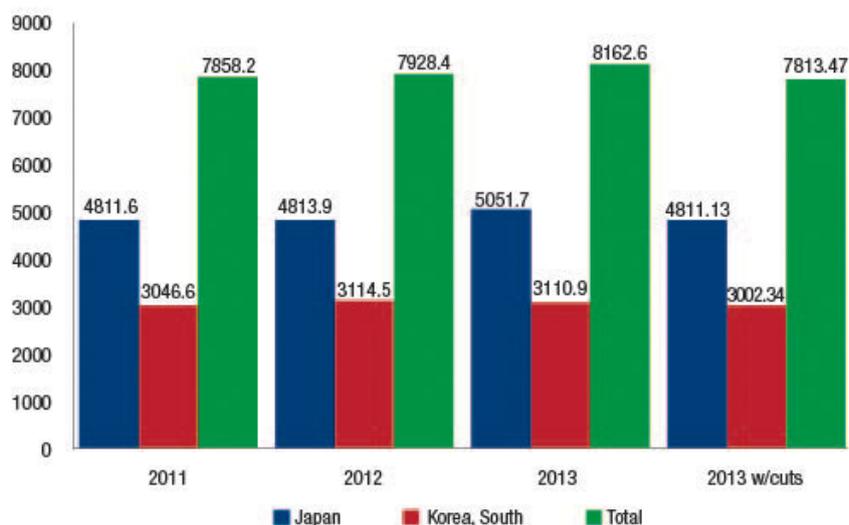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강제몰수가 미국과 한미 동맹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직까지 강제몰수가 실제로 시행될 것인지, 만일 시행된다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없다. 예산통제법에 의하면 사업 전반에 걸쳐 예산 몰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얼마나 몰수될 것이며, 또 어떤 영역이 몰수 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측이 나오는 실정이다. 2012년 9월 백악관에서는 보건과 군인급여와 같은 일부 영역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예산을 9.4~10% 정도 감축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였다. 하지만 의회에서 강제몰수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대안을 입법할 수도 있고 행정부가 강제몰수를 좀더 유연하게 해석해서 실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실행계획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당장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경우 강제몰수를 피하기 위한 타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백악관의 판단이라는 의견이 많다). 벌써부터 미국의 지도자들은 국방부에 강제몰수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20]

그러나 강제삭감이 정말로 미국에 대한 “공격”을 초래한다거나 일부의 주장처럼 미국이 “초강대국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인지를 따져 보려면, 먼저 강제몰수가 가져올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봐야 한다.^[21]

우선 국방비 강제몰수의 영향은 아시아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군 활동에 대한 국방부의 지출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강제몰수로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정부예산의 약 10%가 줄어들면, 2013년 한국에 대한 미군의 지출 감축 규모는 현재의 400만 달러 감축계획보다 훨씬 더 큰 액수인 약 1억 1,2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동아시아 전역에서 원래 미국의 군비는 2억 3천 4백만 달러 증액될 예정이었지만 강제몰수가 시행되면 오히려 1억 1,500만 달러가 감액될 것이다.

국방부의 동아시아지역 주요 지출비용:
장비 및 조직 운영유지, 주택, 건설 (미화 백만 달러)^[22]



이와 같은 예산삭감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미군기지와 시설에서 계획된 여러 가지 보수, 개선, 신축 사업의 지연이나 중단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들 계획된 개선 사업은 삶의 질 문제 (보수되지 않고 교체되지 않은 오래된 막사) 뿐만 아니라 효과성과 관련한 분야 (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새로운 사이버전쟁 시설의 건립 지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예산삭감은 아시아의 미군 재편성계획의 일부인 주요 부대 이동을 지연 또는 중단시킬 수도 있다. 미국 내에서 시행될 강제몰수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예산삭감은 미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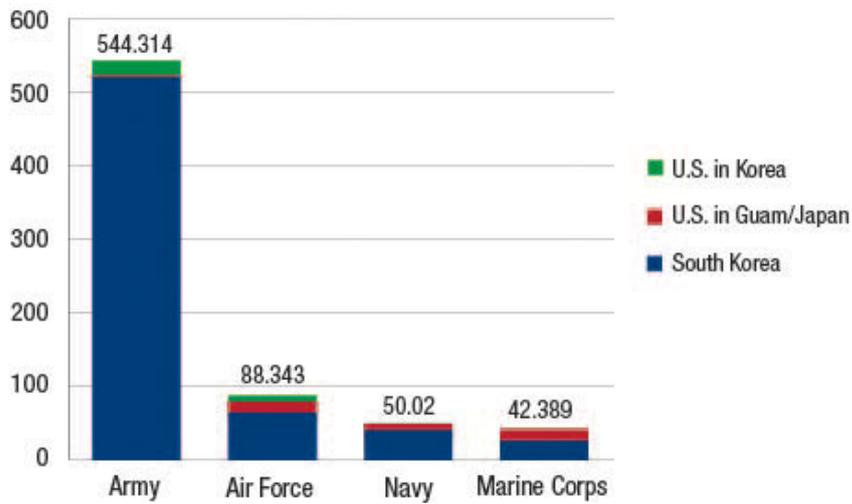
지에 있는 미군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기지주변의 지역경제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군비삭감이 군사작전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다. 즉 예산삭감으로 인해 미군의 교육시간, 기동훈련 및 훈련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미군 고위 장교들은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과의 합동훈련 축소로 군의 준비태세가 약화될 뿐 아니라 상호 신뢰도 저해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예산삭감과 미군 역량 저하를 연결시켜 보면 그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강제몰수로 인해 국방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병력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백악관은 군 병력 부분을 강제몰수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백악관이 차후에 다시 평가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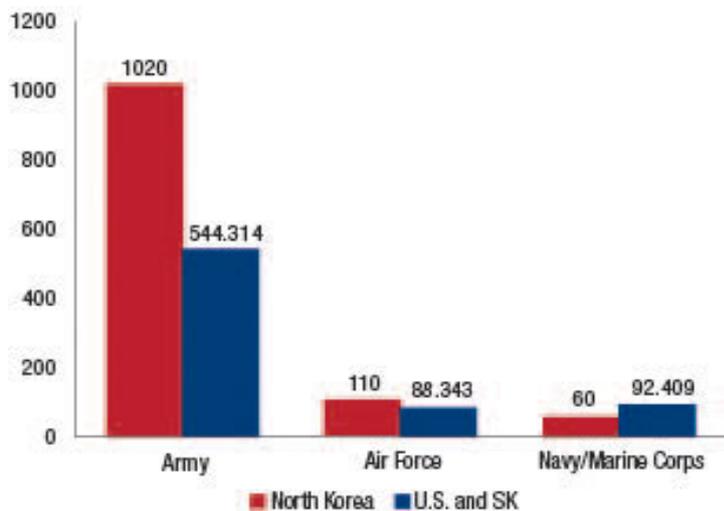
여하튼, 만일의 비상사태뿐만 아니라 어느 날 전쟁이 발발할 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중심으로 10%의 미 군사력 감소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이러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래 그림은 각 군별로 한국군과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수를 합한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2012년 동아시아지역 주둔 미군과 한국군 병력 (천명)^[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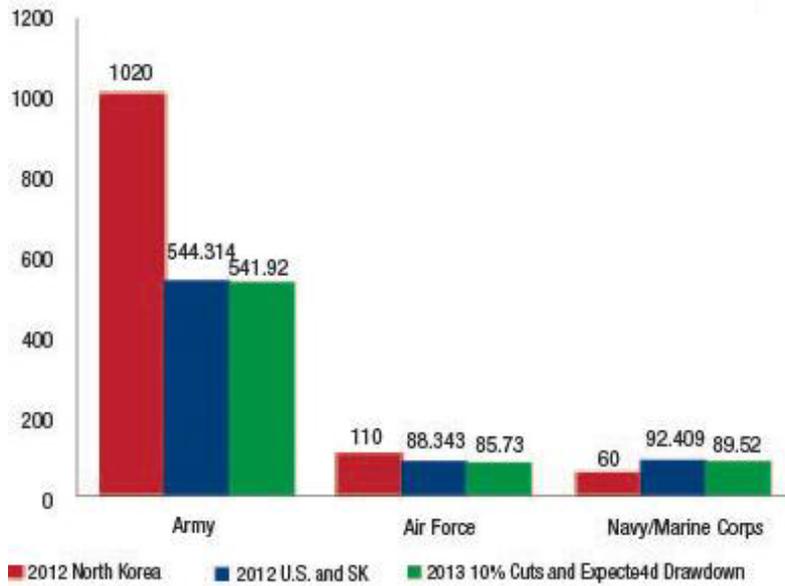
아래 그림은 이를 북한군과 비교한 것이다.

2012년 한미 연합군과 북한군의 병력 비교 (천명)^[25]



만일 기존에 예정된 미군의 최종 병력 감축에 추 가적으로 10%의 예산삭감이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수치 변화가 생긴다.

10% 예산 삭감시 한미연합군과 북한군의 병력 비교 (천명)^[26]



물론 순수 병력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 군사력 측정 을 위한 유일하거나 최선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주한미군의 군사 자원^[27]



강제몰수가 이들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극단적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시나리오를 살펴 보았다. 첫째 시나리오는 주한미군이 이용하는 모든 시스템 전반에 10%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 시나리오를 통해 대규모 삭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가능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좀 더 현실적이지만 끔찍한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강제몰수가 시행되면 국방부의 재량권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다시 말해 일률적인 10% 삭감이 아니라 전체 예산 총액의 10%를 축소하는 한도 내에서 국방부가 대체 가능한 영역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선례에 비추어보면, 작전이나 창정비 廠整備, 민간인 노동자 소요 비용을 삭감하고, 여타 경직성이 크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산 부분 (예를 들면, 병력, 아프카니스탄 같은 지역에서의 유사시 군사작전, 2013년 회계연도 1/4분기)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전체

예산이 10% 삭감이 될 것이지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초당적 정책센터 the Bipartisan Policy Center 는 2013회계연도의 예산 요구에 따라 군 준비태세에는 30%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28]

이러한 상황이 주한미군에게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장에 배치된 무기의 수는 차이가 없겠지만,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일종의 “속 빈 군대”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는 바로 베트남전쟁 종전 후의 상황처럼 수리와 정비의 지연 때문에 많은 무기들이 제대로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군 준비태세 예산이 30% 감소되는 상황을 살펴보자. 현재 정비 수준의 30%가 저하된다면 약 30%의 군 시스템이 파손된 채로 방치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아래 표에는 정비지출을 준비태세로 연결시키는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견들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에서는 적당한 범위를 제공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29]

한미연합군의 군 자산^[30]

Platform	RDK Total	Total with Combined American Assets	Combined after 10% Sequestration Cut	Combined after "Hollowing Out"
Multirole Fighters:	400	686	657	600
Ground Attack and Bombers:	70	103	100	93
Attack Helicopters:	60	94	92	84
Main Battle Tank:	2,414	2,483	2,476	2,462
Armored Combat Vehicle:	220	1,163	1,069	880
Expeditionary/Fighting Vehicles:	2,850	2,912	2,906	2,893
Towed and Self-Propelled Artillery:	11,038	11,108	11,101	11,087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러니하게도 대체 가능한 부분의 예산을 삭감할 경우 연합군에게는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미군 고위장교들이 규모만 크고 속 빈 군대보다 좀더 실속 있고 유능한 군대를 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와 같은 가용 군사력의 핵심 변수는 강제몰수가 미국의 항공모함에 미치게 될 효과이다. 다목적 항공기의 상당수는 항공모함에 있는 항모비행전대 Carrier Air Group 소속이다. 현재 일본에 주둔해 있는 5항모타격단 Carrier Strike Group Five 과 서태평양의 9항모타격단 Carrier Strike Group Nine 은 주한 미 지상군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항공 공습을 가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앞으로 강제몰수로 인해 항모전단의 수가 현재 11개에서 8개로 줄어들 수 있다. 그것은 강제몰수로 인한 예산삭감이 공사 지연, 조기 은퇴, 정비와 수리 지연 (예를 들어, 미 해군 항모 아브라함 링컨호의 원자로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삭감할 경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함의 수가 감소되면 적은 수의 군함이 더 넓은 지역으로 산개될 것이기 때문에 해군의 목표인 6개 항모전단의 배치 및 배치준비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 해군은 설사 다른 지역에 피해가 가더라도 아시아에 모함을 배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려 할 것이다 (일례로 지중해에서는 이미 항모전단을 철수시켰다).

10% 삭감이 되든 30% 삭감이 되든 미군의 가용 병력 수는 분명히 악화되겠지만, 아직까지 “적의 공격을 초래”할 “붕괴된” 군이 되리라는 끔찍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동아시아에 주둔하면서 북한과 분쟁이 발생하면 바로 그 날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지,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되거나 미 본토에서 전투에 배치할 수 있는 군사력(이를 테면 미 본토에 기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면 수 백대 단위로 출동할 수 있는 장거리폭격기와 제트전투기)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과연 강제몰수가 한반도에 분쟁을 유발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북한의 무기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그 상황을 판단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으로 기회의 창이 열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군사력의 균형상태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한미연합군과 북한군의 군 자산 비교^[31]

Platform	North Korea	Total U.S./ROK	Total U.S./ROK with 10% Cuts	Total U.S./ROK after "Hollowing Out"
Multirole Fighters:	74	686	657	600
Ground Attack and Bombers	162	103	100	93
Attack Helicopters:	20	94	91	84
Main Battle Tank:	3,500	2,483	2,476	2,462
Armored Combat Vehicle:	2,500	1,163	1,069	880
Expeditionary/Fighting Vehicles:	560	2,912	2,906	2,893
Towed and Self-Propelled Artillery:	21,000	11,108	11,101	11,087



여기에서 다시 말하지만, 각 시나리오에 따라 한미 양국의 군사력이 악화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쁜 수준은 아니다. 분명히 북한이 비상식적인 정치 행태를 보여 온 나라이지만, 전투기가 612기 적으냐 526기 적으냐에 따라 적의 군사력에 대해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대포를 9882문 더 보유하다가 9913문 더 많아졌다고 결정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판단하지도 않을 것이다.

역사적 사례와 비교를 해 보면, 어떠한 시나리오도 미국의 나약함이 “분쟁을 촉발시킨” 가장 대표적인 현대 사례인 1950년 한국전쟁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아시아지역 주둔병력을 급격히 감축하였고, 이것이 외교적 계산착오와 맞물려 북한에게 침공을 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미국은 방어를 위해 임시변통으로 조직한 스미스 특수부대를 보낼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는 참담한 희생과 더불어 실패로 끝났던 것이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스미스 특수부대는 겨우 406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수적으로 엄청난 열세에 있었을 뿐 아니라,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경무장 보병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북한군 탱크부대에 맞서야 했던 것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스미스 특수부대의 무기가 당시 적군에 비해 훨씬 구식이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미군의 대전차용 로켓은 1950년 당시 북한이 사용했던 소련제 탱크를 관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와 비슷한 일조차도 생각하기가 어렵다. 탱크 한 대 없던 임시로 조직된 400명의 부대와 탱크에서 아파치 헬기까지 갖춘 수만 명의 현대식 전투부대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오늘날 아군과 적군의 무기를 비교할 때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 하나는 하나라는 단순한 계산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현재 북한에 가장 많은 전투기는 미그21이다. 미그21은 베트남전쟁이 발발한 1960년대에 이미 구식이 된 것으로, 명백히 한국의 F-15K와는 비교도 되지 않

는다. 이러한 질적 차이는 공군력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무기 비교에서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탱크 수에서는 북한이 우위에 있지만 동맹군에는 현대식 탱크가 많아서 훨씬 더 강력하다는 점과 대부분의 북한탱크들은 탱크 대 탱크 전투를 위해 근접하기도 어렵다는 점 때문에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북한탱크는 비무장지대 훨씬 후방에서부터 동맹군의 공중폭격으로 파괴될 것이다 (적 탱크의 대부분이 지상사격이 아닌 공중폭격으로 파괴된 이라크에서처럼 말이다).

미국의 연구개발비가 장기적으로 감축될 경우 이러한 기술적 우세가 감퇴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전히 미군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전세계 다른 어떤 국가의 연구개발비보다 클 뿐 아니라 사실상 거의 한 국가의 국방비 총액보다도 더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제5부 결론: 강제몰수는 멍청한 방안이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강제몰수에 대한 우려는 심각한 실정이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우려가 동맹국과 미국의 안보 문제에서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몇몇 최악의 시나리오들과 잠재적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수치들을 살펴본 결과, “미국과 경쟁국들 사이의 군사력 격차”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32] 이 격차가 언젠가는 좁혀질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국방비 삭감으로 인해 동맹국들의 안보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파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 외교협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의 미카 젠코 Micah Zenko 는 “미군이 단지 5,000억 달러의 예산 감축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정확히 짚었다.^[33] 실제로 “대 실패”의 상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동아시아를 비롯해 전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강제몰수가 적의 “침공을 유발할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미군이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적의 공격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다.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실제로는 2007년도와 동등한 수준의 국방예산으로 뒷받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글이 국방비 강제몰수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강제몰수는 굉장히 멍청한 짓이다. 강제몰수는 미국이 당면한 적자 위기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전략에 대한 고려 없이 국방비를 삭감하려는 터무니 없는 처사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계획없이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 모두 똑 같은 비중으로 삭감 처리될 것이다. 그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당초 강제몰수를 법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2011년 채무한계의 위기가 또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 당시에는 정치가들이 타협 하지 못해서 스스로 불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미국 경제를 손상시키고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만약 강제몰수가 시행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미 국방부, 그리고 국방부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불필요하고 자해적인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처를 입히는 것이 곧 “파괴시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발에 총을 쏘는 것은 멍청한 짓이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다.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된 분석을 가지고 나쁜 아이디어와 싸워서 안 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과장된 선전과 히스테리만이 오늘날 무너진 미국의 정치환경에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문제는 벼랑끝 전술이야말로 심각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정치에만 편중되어 잘못된 결론을 내고 두려움을 부추기면서 여론을 당파적 분열 상태로 몰아넣으면, 중국에는 강제몰수를 피하는데 가장 필요한 타협 자체가 요원해질 수가 있다.

국제적 상황으로 눈을 돌려, 국내 여론을 현혹하기 위한 과대선전이 해외에서는 더욱 심각한 우려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국제적 반응은 애초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일이다. 실제로 과대선전은 동맹국들 사이에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군사적 약점을 과장하여 제기한다면, 적성국들은 이를 오인하여 실제로 무모한 행동을 벌일 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글에서 강제몰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까닭은, 특히 적성국의 오판으로 도발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지역에서의 혼란을 일소하기 위함이다. 강제몰수는 미국에 상당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의회가 강제몰수를 피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강제몰수에 의한 국방비 삭감이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이나 심지어 적성국들도 미군의 핵심 전력과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라는 사실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품어서는 안 될 것이다. ^[34] ■

— 피터 W. 싱어 Peter W. Singer 박사는 브루킹스 연구소 21세기 국방 이니셔티브 팀장 및 외교정책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1] “McCain, Graham to Newsmax: Sequestration Will Cause 'Inability to Defend Nation'” Newsmax.com, August 3, 2012.

<http://www.newsmax.com/Headline/mccain-graham-sequestration-defense/2012/08/02/id/447451>

[2] Gregory P. Keeley, “Perils of Sequestration,” *Washington Times*, 8 June 2012. <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2/jun/8/perils-of-sequestration/print/>.

[3] As quoted in Micah Zenko, “Top Twelve Defense Sequestration Scare Tactics” August 23, 2012. <http://blogs.cfr.org/zenko/2012/08/23/top-twelve-defense-sequestration-scare-tactics/>

[4] 그림 출처는 의회 예산처임.

[5] Ibid.

[6] Ibid.

[7] 출처: U.S. Air Force, March 17, 2012. Totals include all war and enacted supplemental funding and do not include Department of Energy national security spending.

[8] Brownfield, Mike. “In Pictures: Defense Spending Plummets under Obama’s Budget.” The Heritage Foundation. 2 May 2012. <http://blog.heritage.org/2012/05/02/in-pictures-defense-spending-plummets-under-obamas-budget/>

[9] 이 차트의 자료 출처는 다음과 같음:

“OMB Report Pursuant to the Sequestration Transparency Act of 2012 (P. L. 112-155),”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14 September 2012. http://images.politico.com/global/2012/09/120914_omb_report_sequestration.html.

“Long Term Implications of the 2013 Future Years Defense Program,” Congressional Budget Office, July 2012.

http://www.cbo.gov/sites/default/files/cbofiles/attachments/07-11-12-FYDP_forPosting_0.pdf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2*, London: Routledge, 2012.

“DOD Releases Fiscal 2013 Budget Proposal,” U.S. Department of Defense, 13 Feb. 2012. <http://www.defense.gov/releases/release.aspx?releaseid=15056>

Keith B. Richburg, “China military spending to top \$100 billion in 2012, alarming neighbors,” *The Washington Post*, 4 March 2012.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china-military-spending-to-top-100-billion-this-year/2012/03/04/gIQAJRnypR_story.html

Pierre Tran, “French Defense Ministry Faces Budget , Staff Cuts,” *DefenseNews*, 29 June 2012. <http://www.defensenews.com/article/20120629/DEFREG01/306290005/French-Defense-Ministry-Faces-Budget-Staff-Cuts>

Pierre Tran, “French Budget Holds Defense Spending Flat,” *DefenseNews*, 2 Aug. 2012. <http://www.defensenews.com/article/20120802/DEFREG01/308020003/French-Budget-Holds-Defense-Spending-Flat>

Paul Kallender-Umezu, “Japan Strives to Overcome Defense Industrial Base ‘Crisis,’” *DefenseNews*, 24 June 2012. <http://www.defensenews.com/article/20120624/DEFREG03/306240003/Japan-Strives-Overcome-Defense-Industrial-Base-8216-Crisis-8217->

“Highlights: Japan’s 2012/13 budget meets targets with sleight of hand,” Reuters, 23 Dec. 2011. <http://www.reuters.com/article/2011/12/24/japan-economy-budget-idUSL3E7NL37B20111224>

“Defence budget (Russian Federation), Defence Budget,” Jane’s Sentinel Security Assessment, 12 March 2012.



<http://articles.janes.com/articles/Janes-Sentinel-Security-Assessment-Russia-And-The-CIS/Defence-budget-Russian-Federation.html>

Robert Barlin, “Defence Export Unit: Gulf Region Marketing Opportunities,” Department of Defence, Australian Government.

http://www.defence.gov.au/deu/docs/Gulf_Region_Market_Opportunities.pdf

Albrecht Muller, “Germany To Boost Defense Budget by 133M Euros,” *DefenseNews*, 7 Sept. 2011. <http://www.defensenews.com/article/20110907/DEFECT05/109070303/Germany-Boost-Defense-Budget-by-133M-Euros>

Laxman K. Behera, “India’s Defence Budget 2012-2013, 20 March 2012. http://www.idsa.in/idsacomments/IndiasDefenceBudget2012-13_LaxmanBehera_200312

“Natural resources rich Brazil plans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to 2% of GDP,” *MercoPress*, 31 May 2012. <http://en.mercopress.com/2012/05/31/natural-resources-rich-brazil-plans-to-increase-defence-spending-to-2-of-gdp>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pril 2012.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2/01/weodata/index.aspx>

[10] Ibid.

[11] Ibid.

[12] Ibid.

[13] Rasmussen, Scott. “Ready to Cut Military Spending.” *Reason.com*. Oct. 2012. <http://reason.com/archives/2012/09/17/ready-to-cut-military-spending/1>

[14]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http://www.iiss.org/publications/strategic-dossiers/north-korean-dossier/north-koreas-weapons-programmes-a-net-asses/the-conventional-military-balance-on-the-kore/>. Based on estimates of 25-33% of total GDP, which is currently projected at approximately \$40 billion.

[15] 이 차트의 자료 출처는 다음과 같음:

“OMB Report Pursuant to the Sequestration Transparency Act of 2012 (P. L. 112–155),”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14 September 2012. http://images.politico.com/global/2012/09/120914_omb_report_sequestration.html.

Keith B. Richburg, “China military spending to top \$100 billion in 2012, alarming neighbors,” *The Washington Post*, 4 March 2012.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china-military-spending-to-top-100-billion-this-year/2012/03/04/gIQAJRnypR_story.html

“China military budget tops \$100bn,” *BBC News*, 4 March 2012. <http://www.bbc.co.uk/news/world-asia-china-17249476>

Paul Kallender-Umezu, “Japan Strives to Overcome Defense Industrial Base ‘Crisis,’” *DefenseNews*, 24 June 2012. <http://www.defensenews.com/article/20120624/DEFREG03/306240003/Japan-Strives-Overcome-Defense-Industrial-Base-8216-Crisis-8217->

“Defence budget (Malaysia), Defence budget,” Jane’s Sentinel Security Assessment, 3 July 2012. <http://articles.janes.com/articles/Janes-Sentinel-Security-Assessment-Southeast-Asia/Defence-budget-Malaysia.html>

“The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2012. <http://www.iiss.org/publications/strategic-dossiers/north-korean-dossier/north-koreas-weapons-programmes-a-net-asses/the-conventional-military-balance-on-the-kore/>



“Taiwan Budget 2012,” *Finance: Maps of World*, 10 Feb. 2012.

<http://finance.mapsofworld.com/budget/taiwan/>

“Singapore raises defense spending by 4.3%,” *AsiaOne*, 17 Feb. 2012.

<http://www.asiaone.com/Business/News/Story/A1Story20120217-328632.html>

“S Korean defense budget sees 5.6% increase in 2012,” 27 Sept. 2011.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10/world/2011-09/27/c_131163128.htm

“Vietnam Announces a 2012 Defence Budget of VND70 trillion (3.3 billion USD),” *Defence Studies*, 23 Nov. 2011.

<http://defense-studies.blogspot.com/2011/11/vietnam-announces-2012-defence-budget.html>

Daisuke Furuta, “Myanmar slashes military spending,” *The Asahi Shimbun*, 7 Feb. 2012.

http://ajw.asahi.com/article/asia/south_east_asia/AJ201202070025

“Indonesia and Philippines to Increase Spending on Defense in 2013,” *Defence Studies*, 25 July 2012.

<http://defense-studies.blogspot.com/2012/07/indonesia-and-philippines-to-increase.html>

“Long Term Implications of the 2013 Future Years Defense Program,” Congressional Budget Office, July 2012.

http://www.cbo.gov/sites/default/files/cbofiles/attachments/07-11-12-FYDP_forPosting_0.pdf

[16] Ibid.

[17] Ibid.

[18] Ibid.

[19] Ibid.

[20] Jonathan Allen, “Hill Talks Wiggle Room for DoD on Cuts,” *Politico Pro*, September 20, 2012.

[21] Mackenzie Eaglen, As quoted at Politico Pro Defense event, Washington DC, September 20, 2012. <http://politi.co/gk0uT>.

[22] “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 Fiscal Year 2013 Budget Estimates,” Office of the Undersecretary of Defense, Feb. 2012.

http://comptroller.defense.gov/defbudget/fy2013/fy2013_OM_Overview.pdf

[23]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legislative/letters/military-personnel-letter-biden.pdf>

[24] 이 차트의 자료 출처는 다음과 같음:

“U.S. Force Posture Strategy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 Independent Assessmen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ugust 2012.

http://csis.org/files/publication/120814_FINAL_PACOM_optimized.pdf

“Active Duty Military Personnel Strengths by Regional Area and by Country,” Defense Manpower Data Center, 31 Dec. 2011.

<http://siadapp.dmdc.osd.mil/personnel/MILITARY/history/hst1112.pdf>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2*, London: Routledge, 2012.

[25] Ibid.

[26] Ibid.

[27] Ibid.

[28] “Indefensible: The Sequester’s Mechanics and Adverse Effects on National Economic Security.” Bipartisan Policy Center. June 2012.

<http://bipartisanpolicy.org/sites/default/files/6-7-12%20FINAL%20Sequester%20White%20Paper.pdf>

[29] <http://www.cbo.gov/publication/22105>.



[30] “U.S. Force Posture Strategy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 Independent Assessmen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ugust 2012.

http://csis.org/files/publication/120814_FINAL_PACOM_optimized.pdf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2*, London: Routledge, 2012.

[31] Ibid.

[32] Gregory P. Keeley, “Perils of Sequestration,” *Washington Times*, 8 June 2012.

<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2/jun/8/perils-of-sequestration/print/>.

[33] Micah Zenko, “Top Twelve Defense Sequestration Scare Tactics” August 23, 2012. <http://blogs.cfr.org/zenko/2012/08/23/top-twelve-defense-sequestration-scare-tactics/>

[34] <http://secondtonone.org/>

-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 재단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연구기관입니다. 본 보고서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 본 번역본은 이곤수 수석연구원의 책임 하에 신영환 선임연구원, 김양규 연구원, 김영신 인턴, 박해진 인턴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곤수 거버넌스연구팀 수석연구원 Tel. 02 2277 1683(내선 106) ksyi@eai.or.kr

